

주간 이슈 리포트

73 호

2005년 3월 둘째주(3/7 ~ 12)

◎ 주요내용

- | | |
|------------|----------------------------|
| - 세상돋보기: | 이현재 부총리의 재테크와 트럭운전사 |
| - 노동자 세상: | 목숨을 내노라는 가압류 |
| - 통신정책: | 초고속 인터넷 시장 이대로는 안된다 |
| - 정자동 6층에서 | 노조위원장 출신 MBC사장과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
| - 만화방 | 시사만화 |



이헌재 부총리의 재테크와 트러블 전사

경실련이 이헌재 부총리 땅투기 의혹과 관련, 이 부총리 아들과 땅 등 가족 모두의 재산공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건설교통부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판교신도시 토지수용 현황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나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실련은 " 지난 2월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변경 사항에 의하면 행정부의 경우 지난 1년간 재산이 늘어난 상위 20명 가운데 13명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고, 이어 28일 공개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법관 재산등록 변경사항에는 사법부도 고위법관 10명 가운데 4명이 부동산 상속이나 시세차익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땅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연설에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노무현대통령에게 이번 사태의 처리가 국민적 신뢰를 획득할지 여부의 최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도 하다.

요즘 여러 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참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귀아프게 눈 아프게 보고 듣던 소리들이 서민과 중소기업에게는 '은행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 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 사이에 우리는 이미 은행 문턱은 정말 낮아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뉴스들이 이 나라 온 언론에 도배되어 있으며 지금도 실 시간 뉴스를 서비스 하는 포털 사이트 뉴스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 글을 읽은 다음에 우선 은행엘 들려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께서 공시지가로 16억씩 나가는 부동산이 없으면 15억이나 되는 거금(?)까지는 대출이 신청조차 되지 않겠지만 16억 짜리 공시지가의 담보에 15억이 심사 하루 만에 대출되는 나라이니 여러분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작은 집 한 채라도 있으시면 요즘 은행 이자도 낮은데 대출 신청을 하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부동산의 공시지가 90%까지 하루 만에 대출을 받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상환능력에 대한 실사도 요즘은 없어진 모양입니다.

단지 담보 물권의 감정가가 대출 액수보다 높으면 대출심사는 그냥 통과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트럭운전을 하며 전세 집에 사시는 분에게도 월 700만원씩 되는 이자에 대한 상환 능력 실사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자 상황이 안되면 그냥 그 담보물을 경매에 붙이겠다는 은행측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되겠군요. 허나 요즘 경매 시장에 나온 물건들이 평균 낙찰 현황은 최소한 3차 경매까지 이뤄지므로 은행에서 공시지가 90%까지 대출을 해 준다면 이미 대출금 전액에 대한 회수를 포기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은행 돈은 남아 돌고 있다는 것을 은행측이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은행사정이 이토록 관대합니까?

지금도 카드대금이 잠시라도 연체되면 연 19~22%까지의 고율 이자가 착실하게 붙고 이를 강제 회수하겠다는 우편물과 독촉전화에 자살의 충동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또 담보 물권이 아무리 있어도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으려면 지점심사만 며칠씩 걸리는 것은 보통이고 심지어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의 등록금 몇 백만원을 대출하려 해도 그 대출 심사가 까다로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현재 부총리 부인의 땅을 매수한 어떤 분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월 700만원에 이르는 고액 이자를 트럭운전으로 충분히 벌어서 갚을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분의 개인 사업 내용이야 제가 속속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이 트럭운전을 해서 버는 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만 통상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운수업에 종사하는, 그것도 트럭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터뷰 내용은 세상 살맛이 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 짚은 그 분도 인정할 것입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 전국 화물연대 총 파업 시 그 화물연대에서 나온 통계가 확연하게 이를 증명해 줍니다. 전망증이 아주 심한 청와대 당국자들에게 다시 한 번 이를 확인시켜 드리기 위하여 당시의 통계들을 인용합니다.

8톤 트럭으로 화물을 가득 적재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려면 고속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최소 왕복 9시간 상 하차와 서울 시내와 부산 시내에서 지체하는 시간 최소 4시간 합 13시간을 소모합니다.

이는 아무리 화물이 많더라도 하루 2회의 왕복은 불가하며 1회 운임이 평균 40만원이므로 고속도로 통행료, 식대, 등 간접경비 5만원과 연료대 20만원의 직접경비를 합해 25만원의 원가가 소요됩니다. 결국 1회 왕복에 15만원의 실 수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25일 풀 운행으로 본다면 월 수입은 375만원이 되는 셈이지만 이 중 제, 세금 보험료 지입료 주차비 차량 할부금 등의 비용이 전 운전자 평균 150만원이므로 25일 풀 운행을 하는 차주가 직접 운행하는 운수 사업자는 월 평균 수입이 225만원이 됩니다.

이 돈으로 가정생활을 해야 하므로 정부 발표 4인 가족 최소 생활비 120여 만원을 공제하면 월 평균 100만원의 잉여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통계일 뿐이며 실상은 25일 운행하는 차량은 거의 없으며 월 평균 운행일 수가 15일 정도인 실정이고 운임 또한 35만원 내외가 정설입니다.

그러므로 1회 운행에 10만원 내외의 수입이 생기며 이를 15일로 환산하면 150만원의 실 수입이 생깁니다. 그러나 제, 세금 보험료 지입료 주차비 할부금 등은 매월 연체 없이 지불 되어야 합니다. 이런 통계로 보면 실상은 월 50만원 정도의 마이너스가 생기며 이는 결국 부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월 700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있으므로 16억 짜리 담보 물권에 15억이라는 거액의 대출이 심사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 전혀 하자가 없다는 강변이 통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청와대에서는 이현재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없으니 이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당국자의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 관계자는 "담보대출은 상환능력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과정의 특혜는 없었다"며 "차씨가 산 땅은 감정평가액26억원이라 대출이자가 연체돼 법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금융기관의 손해는 없다" 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이러한 관례가 적용됩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러한 은행의 발표를 믿고 과연 자신 있게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이 신청 되었다고 하루 만에 대출이 승인되어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까?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평상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현재 부총리의 신상 변동이 임명권자의 권위를 떨어트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김태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었다가 옷 로비 의혹으로, 그 의혹이 일파만파 퍼져서 결국 국회 청문회로, 그래서 중국에는 대통령의 극심한 레임덕으로 이어졌던 전례를 잊으면 안됩니다.

고집이 권위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보도대로 청와대 당국자들의 인식이 한심하다면 이 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과 당국자들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목숨을 내노라는 가압류

"기자를 데리구 오라."

2005년 3월 4일 아침. 240일에 걸친 싸움을 끝내고 싶었다. 절망이 엄습했다. 그래서였다. 손전화로 노조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원골프장의 들머리였다. 그리고 수면제를 먹었다. 이어 왼손 동맥을 끊었다.

원춘희. 서른 여섯 살. 한원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이다. 다행히 노조부위원장이 가까운 조합원에게 "빨리 골프장으로 가보라"고 전화했다. 전화를 받고 달려가 피 흘리며 쓰러져있는 원씨를 발견했다. 119로 전화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원씨가 "기자를 데리고 오라"는 문자를 보낸 까닭은 무엇일까. 자살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서다.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당한 압박과 서러움을 하소연하고 싶어서다.

모진 압박과 서러움 '죽음'으로 호소

지난해 7월이었다. 한원골프장은 경기보조원들을 모두 '용역'으로 '전환'했다. 단체협약은 "용역 전환 때는 사전에 노사협의를 해야한다"고 명토박아 두었다. 하지만 경영진은 단체협약을 시들방귀로 여겼다. 협약을 전면 짓밟은 경영진에 어떻게 해야 옳을까. 경기보조원들이 용역전환을 반대하며 농성에 들어간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자성해야 마땅할 경영진은 되레 용역깡패들을 동원했다. 여성조합원들이 잠자는 농성장으로 들어와 폭력을 휘둘렀다. 십여 명의 여성조합원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어 37명의 경기보조원들을 전원 해고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15억 원과 5억5천만원의 가압류에 들어갔다. 원춘희 조합원에게도 2억4100만원의 압류를 해놓았다.

원씨가 자살을 선택한 까닭은 분명하다. 가압류 압박이었다. 원씨는 동료들에게 늘 근심어린 눈길로 말했다. "어머니가 알면 쓰러지실 것이다." 그랬다. 원씨는 집을 압류 당한 사실을 늙은 어머니에게 알리지 못했다.

"덜컹했죠. 진짜 앞이 막막했어요. 그게 저희 아빠가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물려받은 거고 또 엄마와 공동명의로 돼 있어요. 엄마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저희 엄마 아시면 혈압으로 거의 쓰러지다시피 하겠죠. 그게 제일 걱정돼요."

원씨의 욕성이다. 지난해 9월 19일. 기독교 방송(CBS)과 가진 인터뷰였다. 단체협약을 무시한 경영진은 경기보조원은 어차피 노동자가 아니라고 살천스레 말한다.

그렇다. 경기보조원만이 아니다.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그리고 방송 구성작가처럼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

70여 만명에 이르는 '특수형태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은 물론이고, 산재보험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인권 사각지대다. 이들에 대한 보호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부산을 떨었다. 하지만 저 특별위원회는 활동시한을 두차례나 연기하며 오늘 이 순간까지 '보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는커녕 확산 못해 안달하는 노동부

그 뿐인가. 참여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확산하는 법안을 강행처리 못해 안달이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해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반대하자 파견업종 전면확대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보라.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파견 전면확대가 맞는 방향이지만 노동계의 정서적 반발이 커 국회에서 정치적 고려가 불가피했다"면서 언죽번죽 말했다. "업종 확대는 한 단계만 더 거쳐서 가겠다."

지난 칼럼에서 "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1월 31일자)라며 정부와 언론을 비판할 때, 어떤 독자는 지나치다고 눈을 흘겼다. 과연 그런가. "기자를 데리구 오라"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손목에 칼을 들이댔지만 2005년 3월 5일. 그의 절규에 기자들은, 신문과 방송은, 차가 왔다.

죽지 않아서일까. 그래서다. 옷깃을 여미며 다시 묻는다. "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초고속 인터넷 시장 이대로는 안된다

KT는 며칠 전 발생한 유선전화불통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부 중계교환기 증설과 교환시스템 성능 향상에 200억원을 투입하고, 119 등 특수번호의 분리 운용과 트래픽의 주기적 예측 및 사전 경보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가 유선시장에 대한 투자 축소에서 발생했다면 KT가 중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초고속인터넷 사업분야에 대한 투자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다. 전자신문 기사를 통해 우리가 자만하고 있을 지 모를 초고속인터넷 사업에 대한 투자문제를 짚어본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왜곡된 경쟁 구조는 건전한 재투자까지 가로막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KT로서는 시장점유율이 51%에 달하는 사실상 지배적 사업자만큼 기존 가입자만 유지하면 되므로 별다른 투자를 하지 않아도 크게 수익성이 나빠질 게 없다. 반면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후발사업자들은 가입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수익성이 개선될 리 만무하다. 가입자를 늘리려다 보니 무리해서라도 매출에 비해 더 많은 투자와 마케팅 비용을 투입해야 했다. KT는 이들 후발사업자에 대응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는다.

이 같은 악순환 구조는 또 다른 부메랑으로 되돌아 온다. 후발사업자들이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있다 보니 KT가 굳이 앞서서 투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적당한 마케팅 비용을 들여 가입자 방어만 하면 되지, 대대적인 품질 개선이나 차세대 광대역 통합망(BcN) 구축 투자를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KT의 투자 흐름을 보면 이 같은 현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KT의 설비투자는 2000년 3조5000억원을 정점으로 지난해 1조8000억원대에 이르기까지 매년 급감해 왔다.

대다수 투자가 유선사업의 전달망과 액세스망에 투입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초고속인터넷 투자 역시 급감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올해 KT는 2조2000억원의 설비투자 중 43%를 초고속인터넷과 코넷망, 전용망 등에 투입한다. 초고속인터넷은 그 중 일부분이므로 투자비가 2000억~3000억원도 안 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VDSL 보급 확산을 통해 올해 초고속인터넷 부문 순증가입자 35만명을 확보할 계획인 KT로선 이 투자비 상당액을 가입자 모뎀 구입 등에 쓸 공산이 크다. 품질을 높이는 것보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주로 투자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KT가 올해 주주들에게 환원할 배당금 규모는 6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2000억원의 절반이 주주들에게 돌아간다.

KT측은“민영기업인 이상 수익성 위주로 투자 전략을 짤 수 밖에 없지 않겠냐”며 “되려 외국인 주주들은 매출대비 설비투자를 글로벌 통신기업 수준(15%대)으로 낮추라해 곤혹스럽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입자를 유지하는 마케팅비와 주주 환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초고속인터넷을 통해 거둔 수익의 상당액을 품질 개선 등 재투자에 써야 한다는 게 KT 외부의 시각이다.

KT는 유선에 비해 무선은 규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하며, 무선사업자가 투자엔 뒷전이고 마케팅에만 집중한다고 곧잘 비판했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의 화살이 이제 KT를 향하고 있다.



노조위원장 출신 MBC사장과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MBC사장에 노조위원장 출신인 최문순씨가 선임됐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아직도 노동조합위원장 출신이라하면 전투적이고 자기주장만 펼치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한국사회의 정서를 볼 때 자본가의 '파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자신들에게도 그만큼 이롭기 때문이다.

노조위원장 출신이 MBC사장에 내정됐다. 신입 MBC사장으로 내정된 최문순씨는 MBC노조 위원장과 언론노동조합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신입 사장에 내정되면서부터 고강도의 개혁을 단행할 것임을 밝혀왔다. 최사장은 이미 연공서열 폐지와 팀제 도입, 임금삭감분에 해당하는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상당수의 정규직화 등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상태. KBS의 '팀제 도입'에 영향받은 것으로 알려진 MBC의 '대국 소팀제'는 1팀당 10명 내외로 150개팀을 구성될 계획이다. 최 내정자는 "나이와 직급, 직종에 관계없이 최적임자를 팀장으로 임명하고 인사와 재정, 편집권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문순 사장의 MBC개혁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여타의 경영자들과 다른 무엇이 있다. 최사장은 "구조조정보다 인력 재배치, DMB·해외사업 등 신사업 발굴을 통한 보직확대로 고령자 일자리 확보에 주력하겠다"며 "선후배들이 명예로운 공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인정한데서 오는 경영마인드이기는 하지만 말이지만 사람을 기계로 보지 않는 경영진의 사고 변화이다.

사실 노조위원장 출신의 사장보다 더 놀라운 일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문순씨를 사장으로 내정하는 파격이다. 그만큼 MBC개혁에 절박했고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노조위원장 출신이 적격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치더라도 긍정적인 변화가 엿보인다.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가 아닌 경영의 파트너로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KT노동조합은 2003년부터 경영참여를 요구해오고 있다. 노동조합이 경영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KT의 약 6%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그리고 KT의 3주체중 하나인 직원으로서 고용 보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고용도 결국에는 회사의 발전이 있어야만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KT는 외국인이 49%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27%가 자사주로 묶여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 유통되는 주식은 24%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 국내유통 주식중 6%이상을 KT의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다.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경영진은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하면 주주들이 문제삼을 것이라고 하지만 조합원들은 주주가 아니란 말인가?

KT의 경영진, 그리고 이사진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들로부터 수업을 받아야 한다. 진정 KT의 변화와 개혁을 바란다면 경영진 혼자 힘의 아닌 노사 공동의 힘으로 이뤄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만

화

방



부럽다, 부끄럽다.

프랑스와 한국의 차이점

| 가해국가: 독일 피해국가: 프랑스 | 비교 항목 | 가해국가: 일본 피해국가: 한국 |
|--|-----------------------|--------------------------------|
| 1944년~1948년 (4년 2간) | 1. 점령 기간 | 1910년~1945년 (36년 2간) |
| 연로인 간부 6명 사형, 250개 언론사 폐간 및 언론사 재산 몰수. | 2. 해방 후 미국 진상규명 노력 | 조선일보를 그냥 용서함. 동아일보를 그냥 용서함. |
| 60년 후 | | 60년 후 |
| 독일은 지속적으로 나치 전범 처벌함 | 3. 전범 처벌 | 일본은 신사참배하며 전범을 추앙함 |
| 1970년에 벌써 독일총리 사죄함 | 4. 총리 사죄 | 2005년 현재까지 일본총리 매우 바쁨 |
| 독일은 개별적으로 종군위안부에 보상함 | 5. 종군위안부 개별 보상 | 일본은 박정희씨 한테 전부 보상했다고 함 |
| | 6. 내친김에 | 해방되었어도 "독도"는 아직 일본땅이라고 함 |

도표설명 60년이 지나도록 전일청산은 고사하고 전일 진상규명조차도 못하면서 역대 정부는 3.1절을 무슨 연유로 만드셨나요? '피로연'인가요?

참고문헌 중앙일보, "일본은 자성하고 한·일협정 재고할", 2005-1-26, 윤용선 교수 경향신문, "盧, 佛 과거청산 '모범사례' 제시", 2005-3-1, 이영욱 기자 MBC, "신강군의 사실은 방송분", 2004-2-13

